



	코스피	2285.06 (+4.44)		코스닥	819.29 (+14.51)
	금리 (국채 3년)	2.11 (+0.06)		환율 (USD/원)	1125.90 (+5.90) (12일)



[해설]
 마트 번신은 무죄
 유통 3사
 '신삼국지' 각축전
 03

카드론·현금서비스의 불편한 진실

(연간 기준)

제도권 금융사가 '24% 초고금리' 저신용자에 급전대출 1.2조 수익

업계, 고금리상품 취급 늘려 현금대출 통해 수익 확대 서민 대상 고금리 장사 지적

카드사들이 올해 들어 단기간 대출(현금서비스)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고금리 상품 취급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품을 이용하는 대상 대부분이 중·저신용자여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을 보면 2015~2016년 1분기 1조 원대, 2017년 1분기 1조

1623억 원대였던 7개 전업 카드사(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의 현금서비스·카드론 수익(매출)이 올해 1분기 1조1879억 원으로 뛰어올랐다. 지난해 대비 800억 원가량 증가할 수 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경우 카드론 수익은 올해 1분기 2128억 원으로 2016~2017년 1분기 1900억 원대보다 10%이상 증가했다. 현금서비스(823억 원)까지 합하면 1분기 수익은 2950억 원에 육박한다. 2위인 삼성카드도 카드론이 2015년 1219억 원대에서 2018년 1분기 1600억 원대로 증가해 지난해(1448억 원) 대비 10%이상

늘었다. 중위권 카드사들도 카드론 매출 확대를 통해 수익을 확대했다. 2015-2017년 우리카드 카드론 수익은 525억 원, 661억 원, 716억 원으로 서서히 증가하다 올해 1분기 774억 원을 기록했다. 롯데카드도 지난해 잠시 주춤했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비중을 확대해 각각 854억 원, 246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이 연평균 15%이상의 수준인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확대에 나선 이유는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보다 수익이 짝짱한 현

금대출을 통해 수익을 피하려는 의도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은 (중금리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여신금융협회 상품공시에 따르면 카드론은 16~24%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절반 이상은 18~24%금리 대에 분포했다. 18~24%의 금리를 받는 신용등급은 주로 6~10등급이다. 고금리 대출상품에 고 금리를 내야 하는 중·저신용자들이 몰려있는 셈이다. 특히 현금서비스의 경우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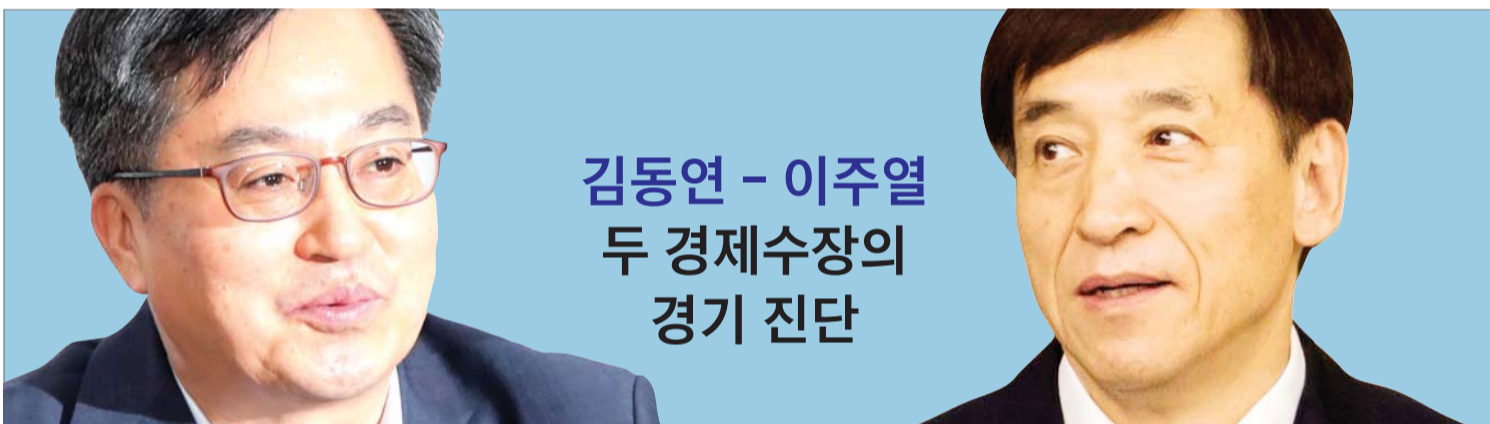
<분기별 카드사 수익 비교(2015-2018)>

(단위:백만원)

금융회사명	구분	2015년1분기	2016년1분기	2017년1분기	2018년1분기
KB국민카드	카드론	105,997	123,488	149,148	169,108
	현금서비스	45,178	41,194	41,199	45,944
롯데카드	카드론	77,061	82,949	80,672	85,490
	현금서비스	27,779	24,153	22,800	24,626
삼성카드	카드론	121,971	139,596	144,867	161,837
	현금서비스	43,901	44,300	43,203	47,355
신한카드	카드론	163,157	189,056	194,860	212,805
	현금서비스	98,516	94,184	85,474	82,334
우리카드	카드론	52,596	66,135	71,614	77,481
	현금서비스	27,244	29,763	28,117	27,343
하나카드	카드론	56,793	54,162	63,310	70,489
	현금서비스	28,611	24,440	26,104	26,773
현대카드	카드론	128,189	127,518	123,600	123,873
	현금서비스	27,968	30,999	31,266	32,539
총합		1,004,961	1,071,937	1,106,234	1,187,997

금리를 내야 하는 22~24%대 금리 구간에 삼성카드의 49.9%, KB국민카드의 47%, 현대카드의 41.3%의 회원이 몰려있었다. 전체 회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전성인 흥익대 경제학 교수는 "용도가 좋은 사람에게 는 할부금리를 높게 받고, 카드빌

을 막기 위해 카드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금리를 받아 장사 한다"며 "신용등급별 이용형태에 따라 다른 금리로 수익을 얻는 영업 행태가 계속되지 않게 시스템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김동연 - 이주열 두 경제수장의 경기 진단

“최저임금, 고용에 영향 시장 고려해 신축적으로”

긴급 경제현안간담회

정부가 최근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내수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긴급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며 “일자 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대책에 내수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한 첫 단추로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관련법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김 부총리는 최근 일부 업종의 고용부진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있다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에 대해 김 부총리는 “통상 갈등이 확대하면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세계 경제가 위축할 수 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최신용기자 grandtrust@

“올 성장률 전망 0.1%p ↓ 무역분쟁 등에 금리동결”

한은 '하반기 경제전망'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하며 국내경제를 기존보다 한층 어렵게 내다봤다. 기준금리도 1.50%로 동결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2.9%, 내년 2.8%로 각각 0.1%포인트 내렸다. 지난 4월 전망 때 내놓은 3.0%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발 글로벌 무역분쟁이 확대된 점과 상반기 지표가 다소 부진했던 점을 조정 이유로 밝히며, “올해 국내경제는 투자가 둔화하겠지만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도 개선 흐름을 보이지만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문별로 보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2.9%에서 1.2%로 낮게 전망했다. 지난해 반도체 등 정보통신 분야 투자가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일부 업종의 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도 건물 착공면적 감소세와 SOC 예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0.2%에서 -0.5%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1.6% 오를 것이라던 전망을 유지했다. 현재 배럴당 70달러 중반을 기록하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2019년에는 1.9%를 나타낼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도 4월 전망 때와 같이 2.7%로 제시했다. 양호한 소비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청년일자리 추가 예정(추경)·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이 소비 증가세를 뒷받침할 것이라던 시각에서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당분간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점검해 통화정책 완화 기초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알바보다 수입이 적다나... 편의점주, 동맹휴업 결의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정부 정책 재검토 강력 촉구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시 전국 동시 휴업을 추진하는 등 대정부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12일 오전 전편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업계는 한계에 달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편의점 가맹주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 계획 철회 및 최저임금 동결 ▲영세·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등이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잠재적 폐업점포의 연쇄 폐업이 예상된다”면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투자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폐업할 수밖에 없어 실업자 및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국내 주요 편의점의 올해 상반기 순증 점포수(개점수-폐점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가량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1월부터 6월까지 편의점 CU의 순증 점포수는 394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2개에서 급감했다. G

S25는 지난해 1048개에서 올해 343개로 감소폭이 더욱 컸다. 세븐일레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0여개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올해 점포 순증수가 감소한 데엔, 폐점수가 증가한 것보다 개점수가 감소한 것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점포 개점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과 맞물려 편의점 시장의 성장이 정체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편의점 점주들은 ‘생존권’을 요구하며 필요시 대정부 정책의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편협은 13일까지 최저임금위심의 내용을 우선 기다린 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16일부터 전국 7만개 편의점의 동시 휴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